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7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일정에는 박홍근(원내대표), 이수진(원내대변인), 박찬대(팀장), 최혜영(간사), 강민정, 김주영, 이용빈, 인재근,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 ▲사후 관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국가 통계 발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 건수 역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지속·반복되기 때문에 지체 없는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데, 기관 설치 이후 인력 및 예산의 큰 증가 없이 업무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은 4~5명으로 유사 기관인 노인 및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도(道)소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편도 평균 2시간 7분에 달한다. 강원·충북·경북 등의 경우, 피해자 조사 시 왕복 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전남 등 도서 지역의 경우는 제한된 교통편으로 인해 당일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학대 현장 출동 지연으로 피해자의 중대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응급조치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정서적·심리적 지지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피해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팀장 박찬대 의원, 간사 최혜영 의원)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학대 실태와 학대 예방 방안 및 피해 지원 체계를 살핀다.

이어, 현장에서의 고충 청취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끝>

2022. 7. 13.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